

##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다”



심포지엄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은 아산재단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심포지엄 주제를 정했다.

심포지엄은 최재성 아산재단 학술연구자문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 2부 김대중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 시스템 연구’, 3부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네트워크적 접근’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했다.

### 제1부 디지털 헬스케어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통한 발전 모색

디지털 헬스케어는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신산업이다. 시장조

사업체 GIA(Global Industry Analysts)는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르게 치솟아 오는 2027년에는 5,08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현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주자인 원격의료는 온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오지의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정밀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축진을 부른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 한정하는 현재의 시스템 변화는 불가피하다. 의료기관이 중심인 의사와 환자의 단편적 구조로는 향후 의료산업발전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축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비용이 수반되는 신기술이 많아, 결국 대형병원이나 대형기업과 연계돼 부유층 소수만 혜택 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어서 AI의 결정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윤리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인간 생명과 안전, 윤리적 문제도 지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호용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2부 공공갈등 해소

###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방정부 위임 필요

김대중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의료원 민영화 갈등 관리 사례,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문제, 월성1,2호기 조기폐쇄 등의 공공 갈등 사례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갈등 조정의 핵심 키워드를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참여적 갈등관리, 지방위임의 4가지로 꼽았다.

먼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진행 시 벌어질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갈등의 등급을 미리 결정해 대비하는 선진국과 같은 예방과 참여적 갈등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과 더불어 협상,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방식인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공공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안적 분쟁해결' 과정을 각 대학과 공공기관 등으로 더욱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이해 당사자 양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조정'에 참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공갈등 해소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방위임이 필수적이다. 부산의료원 민영화 사례가 대표적 성공사례다.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진행됐고 중요한 결정이나 합의점에 도달할 때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등의 균형을 맞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 교수는 "공공갈등 해소에 있어 중앙정부의 조직화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방에 힘을 위임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한국형 갈등관리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 제3부 사회복지 패러다임

### 관계 지향적 거버넌스로 풀어야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중심적 네트워크 사회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미래사회에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뜻하는 '관계 지향적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우선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은 주로 국내 중심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여지가 크다.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는 가치를 생산하는 실질적 자원이 되는데,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를 조직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시장과 시민사회를 촉진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일 경험 플랫폼, 시민 협상교육 플랫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처럼 국가 주도로 마련된 공론장을 바탕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는 상호협력자로서 디지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감시와 통제 강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국가의 개인정보 활용을 역감시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네트워크 사회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해체와 단절, 사회집단의 편향과 독점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소외와 갈등이 심화하는 경향도 관찰됐다"며 "미래의 사회안전망은 사회집단 간 관계의 질을 높이고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재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재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글 편집부